

종합·해설

초유의 당선자 수사... '태풍의 핵' 되나

정부가 26일 'BBK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백지상태'인 특검팀이 시간적 한계 속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게 될지 주목된다.

▲초단기 집중형 특검 수사= BBK 특검법은 앞서 통과된 7개의 특검법과 비교할 때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삼성 특검보다 5일 줄어든 '최장 10일'이며, 수사 준비기간도 기존의 특검법안들이 20일 가량 부여했던 것과 달리 7일에 불과하다. 두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삼성 특검법이 가장 105일까지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지만 BBK 특검법은 분수사기간 30일에 1차 연장 10일을 포함해 길어봤자 40일짜리의 '초단기 모델'로 만들어졌다. 특검법 공포 및 특검 임명시한, 준비기간 등을 따지면 늦어도 내년 2월 17일까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열흘을 연장하더라도 같은달 27일에는 수사가 끝나므로 시간을 약간 절약하면 제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2월

■ 'BBK 특검법' 원안 의결과 전망

동영상·주가조작·도곡동 땅 쟁점 '살아있는 권력' 소환 등 난관 산적

25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취임 전에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이 당선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팀이 동행명령 등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이 앞서 BBK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조사해 놓았다는 점도 신속하게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수사 대상은=특검팀은 이 후보의 읍서빌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 관여 여부와 도곡동 땅 및 ㄸ다스의 차명소유 여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삼양동 DMC 특혜의혹, BBK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혹은 편파 수사 여부 등을 수사한다. 특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와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 17억여원이 BBK 투자자였던

ㄸ다스로 유입된 점 등은 이 당선자가 재산을 차명소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결부돼 있다. 또한 막판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 동영상'에서 이 당선자가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자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명되면 선거운동 기간에 "BBK는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공언한 이 당선자에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밖에 사상 초유의 수사감사 탄핵안 발의까지 남겨 한 김경준씨의 '검찰 회유설'도 특검팀이 최종적으로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곳곳에 난관, 다른 결론 나올까=검찰에서 각종 수사기법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내린 결론을 특검팀이 짧은 기간 내에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후보와 BBK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명함이나 홍보책자, 언

론 인터뷰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마친 뒤 '무혐의 판정'에 이른 것이어서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검팀이 추가 비리 단서를 찾으려면 수사를 새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한달여만에 검찰이 동원하지 못한 수사기법으로 새로운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특검 성 과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해야 하는 특검 직무를 누가 선택할 말의 것이며, 이 당선자가 수사기간 내에 특검팀의 소환이나 대질조사 요구에 응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특검 수사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아울러 수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못하면 그 이후에 특검팀이 혐의를 찾아내더라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벽에 또한번 부딪쳐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BBK 사건 보고수사 및 법원의 김경준씨 재판 등 일정과 특검 수사 일정이 뒤죽박죽으로 섞일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특검수사의 난관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BBK 특검법'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 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성진 법무장관.

농가 부채·이자 동결 공약 '논란'

이명박 정부 농업정책, 현 제도 상당부분 고쳐야 가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농업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농림부 안팎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이 당선자측 농업 공약들이 대체로 '맞춤형 농정', '개방대비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육성' 등의 기존 농정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가 부채 및 이자 동결, 쌀 목표가 유지 등의 공약은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고쳐야 가능한 만큼 조율과 수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산업육성·농업인소득보전 속도낼 듯=우선 이 당선자의 농업 공약 가운데 대표적으로 '농업농촌식품부'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업인 기본 소득 보장' 등은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들과 공명이 잘 맞는 것들이다.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최근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며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 농림부 입장에서 크게 반길만한 소식이다. ▲정부 '쌀 목표가 동결' 수용 전망=그러나 당장 농림부가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공약들도 있다. 이 당선자측의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kg당 17만 원 이상 보장' 공약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뜯어고치거나 적용을 유보해야만 가능하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정부 차액 보전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과거 5년동간의 시장가격 평균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반적 쌀값 하락 추세에 맞춰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법령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2008~2010년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6만1천원대로, 2005~2007년 목표가보다 5% 정도 낮아졌다. 이 같은 목표가 인하에 농민단체

들이 반발하자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당선자측 공약과 같은 내용의 '5년간 쌀 목표가 유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농업인 전면 부채·이자 동결은 '비현실적'='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을 통해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공약도 실천에 옮기려면 예산 문제와 함께 현실성을 따져 많은 손질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같지만, 부채를 가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실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 내부에서 농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농업정책의 비효율적인 '퍼주기'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검토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는 26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재경부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석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유가 동향이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소위의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정하고 있는 특수세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되 정부가 현행 20%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내일(27일) 전체회의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특검 후보 인선 착수

정치적 중립성·수사력 겸비한 인물 초점

대법원은 'BBK 특검법'이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 본연의 기능에 비취될 때 바람직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내년 1월1일 전까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2일)과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회의(2일), 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 대통령의 임명(3일) 등 최장 10일 안에 특검이 임명된다. 대법원은 특검이 최장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과 수사력을 겸비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특검후보 선정에 검토 중이다. 특히 검사출신을 추천할지, 판사 또는 변호사 출신 후보를 추천할지 고민하고 있다. 검사출신 후보를 추천할 경우 검찰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고, 판사나 변호사 출신을 추천하면 수사경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만큼 수사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수사하는데다 소환조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후보직을 고사하는 인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선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민·노령연금 통합 추진

새 정부서 본격 논의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뤄진 연금구조를 하나의 연금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신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다른 맞춰가야 하는 '쌍꺼풀 정책'"이라며 "개법안으로 돼 있는 두 연금을 한 법에 묶어서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자문교수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도 안을 만들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특위까지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의